대한민국 복지허브 NO.1 경기복지재단

vol.09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 발행인 (박춘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 Tel. 031-267-9399 | www.ggwf.or.kr | 2015.07.08.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보건과 복지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 발의 : 분리가 답인가?

01 배경 및 주요 쟁점

- 메르스 사태 확산이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재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건과 복지를 구분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춘진 의원이 발의(6.30.)
  - 보건의료부 : 보건위생 · 방역 · 의정(醫政) ·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 소관
  - 복지부 : 생활보장 · 자활지원 · 사회보장 · 아동 ·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소관
- 분리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 **첫째, 보건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때 더 효과적인 업무가 상당수 존재**

-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이 대표적인 경우로 저소득층에게 가장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업무 이원화로 서비스 제공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 **둘째, 보건부가 명실상부한 보건관련업무 총괄 부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전반의 기능 조정이 이뤄져야 함**

- 질병관련 업무 외에 환경부 소관의 환경보건,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보건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 기능을 모아야 하므로 정부 조직 전체 개편이 필요

■ **셋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 등 전문 인력 위주로 배치하게 되면 보건의료분야의 세분화 및 분절화 심화 우려**

- 또한 건강보험 업무를 보건부가 맡고, 보건부에 의사 출신 관료가 진입하면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협상 등에 의료계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음

02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OECD 34개 회원국 중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보건과 복지를 별도 부처로 운영

국가	보건담당부서	비 고
영국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보건복지 영역사이에 융통성을 두어 통합서비스를 지향, 보건복지공동 프로젝트에 통합재정으로 지원
미국	연방보건부(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공공보건사업,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 관리, 질병통제와 식품약품관리 업무 담당
독일	연방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BMG)	연방정부는 의료제도와 질병보험 총괄, 주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한 공중보건과 입원요양 담당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보건의료복지 및 고용까지 사회보장 전반을 관장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보건부기능에 노동, 고용담당 부처 통합(2010.11. 25.)
중국	위생부(衛生部)	보건, 방역, 의정, 약정, 사회복지, 의료보장 및 가정복지 등의 업무 담당

-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하고 질병이 광역화되면서 보건 전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으나 복지와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 영국은 복지와 보건이 분리되어 있으나 두 영역의 연계를 위한 통합 재정 등 부단한 노력을 시도
- 보건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인력 충원과 즉시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더 시급한 과제
  - 역학조사관 등 부족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감염병 대응 경험 강화 등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응급 의료 상황에 대한 즉시적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보건인력 및 조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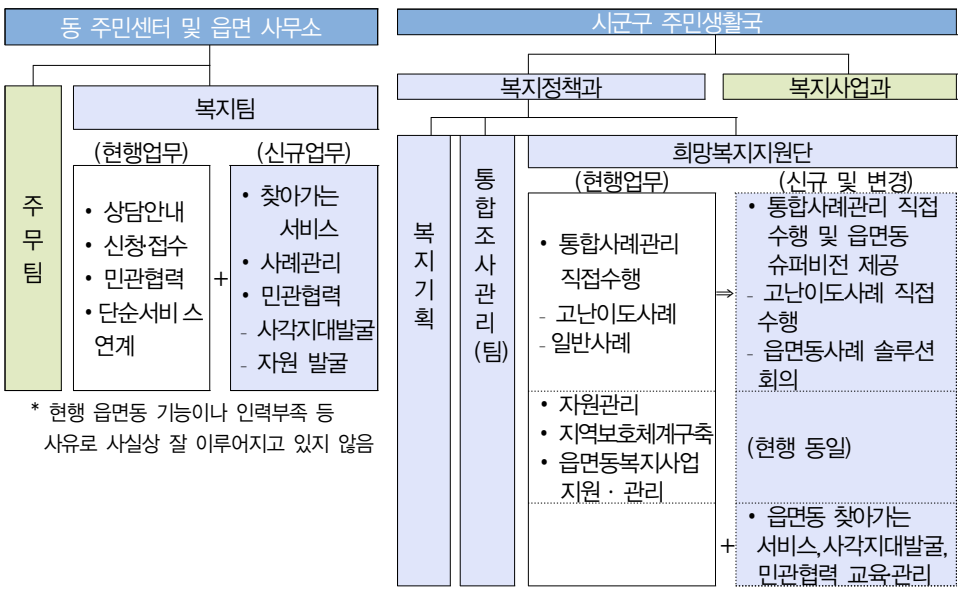
2.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충

01 현 황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7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명이 증원될 예정
- 사회보장위원회는 증원되는 인력은 읍면동 등 최일선 행정기관에 우선배치하고 시·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확정하였고('14.6.),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방안 관련 지침을 시달('15.6.26.)

02 주요내용

- 동 조직에는 복지팀이 신설되어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민관협력을 수행
- 확충되는 인력 규모, 동의 여건을 고려하여 2~4개 동의 통합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중심읍면동 설정도 가능해짐
- 시·군 조직인 희망복지지원단은 고난위도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로 역할이 변화되었고, 기존의 자원관리, 복지사업 관리 외에 슈퍼비전, 민관협력, 교육 등 지원체계를 운영
- 이외에도 읍면동별 600만원의 사례관리비가 지원되며, 행복e음 권한도 확대될 예정



03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계획 마련
  - 지자체 여건에 맞는 모형 설계의 어려움 및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모니터링, 컨설팅, 조율 작업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동 통합사례관리 업무간의 연계체계 구축 필요
  - 시 무한돌봄센터는 희망복지지원단과 동일한 긴급사례관리 업무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거점단위에서 이뤄지는 민관협력사례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팀과 동 통합사례관리체계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됨

3.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 75세 이상 치매체크 강화(2017년 시행)

01 주요 내용

-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상의 자동차 역주행은 224건이며, 이 중 운전자가 치매인 경우가 27건으로 12.1%에 해당. 인사사고는 22건 중 22.7%(5건)이 치매가 원인이었음(경찰청 분석발표, 2015.6).
  - 역주행 사고 중 152건(67.9%)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였으며, 연령대는 70대가 74건으로 가장 많았음
- 75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치매체크 체제의 강화를 반영한 개정도로교통법이 6월 1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됨(2017년 6월 시행)
  - 치매가 의심되는 75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고 치매 우려가 있는 노인은 의사의 정밀 진단 후 면허 갱신 가능
  - 면허갱신은 3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 사이 인지기능의 저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역주행, 신호무시 등 치매증상으로 일으키기 쉬운 교통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임시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 졸업증 제도
  - 일본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75세 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 도쿄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 제공, 도야마현은 반납자에게 대중교통 1년분 승차권을 지급, 후쿠이현은 버스 무료 이용권을 지급함
  - 야마구치현은 '운전면허 졸업증' 제도를 실시. 운전면허 반납은 노인의 반발과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졸업' 이라는 긍정적 수사를 통해 거부감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가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 졸업자 서포트 수첩' 을 교부, 수첩을 가진 사람은 전동자전거와 전동차 구입 시, 온천·미술관 등을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졸업자' 에게는 각종 상품의 배달료를 면제

02 한국에의 시사점

- 일본은 2005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12년 고령자 치매의 경우, 약 462만 명으로, 오는 2025년에는 700만 명에 달해 고령자 인구의 20%가 치매를 앓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후생노동성, 2015).
- 한국의 치매인구도 2012년 53만명에서, 2020년에는 79만명으로 예측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임(2008년 전국치매 유병률 조사,2009).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예방의 대책마련과 일본과 같은 '운전면허 졸업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고령 운전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책 마련이 요구됨

02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제정 등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

- '사회적일자리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 발의)은 '사회적일자리' 및 '취업취약계층' 등 용어 정의를 비롯해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 실시, 도민의견 수렴창구 운영,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예산편성과 시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고용시장이 경직화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입법화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일자리가 일반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보완하고 틈새를 메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 개정 내용을 7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음

2. 서울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비율 5%까지 확대 선언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을 사회적 가치 구현에 방점을 둔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로 조성하겠다고 발표('15.7.3.)

- 서울시는 최저가격낙찰제로 이뤄지는 공공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없애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업무협약'을 체결함
-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서울시, 시 교육청, 자치구 등 34개 기관으로 '서울시 사회책임조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별로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구매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는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공시제'를 시행하기로 함
-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비율을 2020년 5%대로 높이겠다는 계획임

* 공공조달 : 일반계약, 민간위탁 민간지원사업 등 공공부문 정책과정에서 이뤄지는 민간부문과의 협력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단위: 백만원,%)

	'14년 실적			'15년 계획		
	총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B/A)	총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B/A)
서울특별시	209,707	9,043	4.31	238,789	15,000	6.28
부산광역시	42,359	1,297	3.06	46,340	1,300	2.81
대구광역시	43,062	507	1.18	48,420	1,452	3.00
인천광역시	36,475	361	0.99	36,589	364	0.99
광주광역시	58,263	1,286	2.21	58,263	1,286	2.21
대전광역시	40,724	1,743	4.28	40,724	1,743	4.28
울산광역시	29,616	234	0.79	29,542	238	0.81
세종특별자치시	16,305	191	1.17	16,600	195	1.17
경기도	76,715	588	0.77	39,851	1,191	2.99
강원도	63,696	676	1.06	63,905	697	1.09
충청북도	30,423	458	1.51	30,434	500	1.64
충청남도	44,409	397	0.89	44,409	463	1.04
전라북도	34,235	1,060	3.10	34,920	1,082	3.10
전라남도	44,193	216	0.49	46,844	401	0.86
경상북도	58,421	110	0.19	59,383	511	0.86
경상남도	36,958	388	1.05	37,700	477	1.27
제주도	76,495	3,392	4.43	76,694	3,571	4.66

자료 : 고용노동부

*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를 기조로 제도화 되어 있으나, 의무구매율을 강제하지 않음

03 FACT CHECK

개인정보 보호의 명암

- 7월 8일, "제4회 정보보호의 날" 을 맞아 사회복지현장에서 개인정보수집 및 취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관리가 요구됨
- 사회복지시설의 개인정보 보호 Tip
  - 이용자, 입소자, 근로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 명문화, 직원교육(연1회 이상)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파일 보관(잠금장치, PC 비밀번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권한 설정, 개인정보 파기(파쇄기 설치, 전자파일 영구삭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제공 시 공문에 의한 판단 및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사회복지시설 편(보건복지부, '13.12.)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및 권리 증진에 기여한 반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강화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사례관리는 지역 내 민관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대상자의 현 상황, 서비스 이력, 상담 이력, 서비스 계획 등의 정보 공유가 필수이지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복지대상자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도 민간 사회복지사는 접근 권한이 없고, 정보를 넘겨받기도 어려워 중복 조사와 재상담을 진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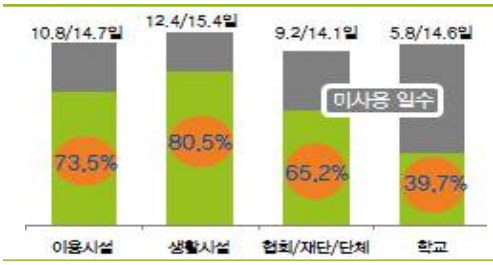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사망자, 법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다른 정보와 결합한 경우 '이름 + 이메일' 은 유권해석 상 개인정보가 아님

04 통계로 보는 복지

사회복지사가 꼭 가봐야 할
2015 한국관광 100선 속 경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연차 사용 비율은 평균 73% 정도이며 학교사회복지사의 휴가 사용은 연차 대비 40%로 가장 낮게 나타남

사회복지사 휴가 사용일수



여름휴가 사용일수

- 사회복지사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여름휴가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2015 한국관광 100선" 에 포함된 경기도 관광지 8곳을 추천
  - 가평 쁘띠프랑스,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수원 화성, 양평 두물머리, 용인 에버랜드, 용인 한국민속촌,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포천 허브아일랜드
- 그 중 쁘띠프랑스는 유럽풍의 건물, 전시물, 공연 등, 한국에서 도 유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MBC 베토벤바이러스, SBS 별에서온그대 등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함
- 양평 두물머리는 이른 아침에 피어나는 물안개와 일출, 4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어우러진 한강 제1경(두물경)으로 주변을 도보와 자전거로 둘러볼 수 있어 힐링여행지로 각광받음

가평 쁘띠프랑스

양평 두물머리